



## 사람 살리는 착한은행 주빌리은행([www.jubileebank.kr](http://www.jubileebank.kr))

주빌리은행 이사 조영민

### 1. 주빌리은행의 설립배경 및 활동방향

대한민국은 12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부동의 1위입니다. 특히 돈(빚) 때문에 죽는 사람이 다섯 명 중 한명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2015년 8월 27일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KDI교수)이 출범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그 동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폈고,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 청년실신(실업+신용불량)을 양산했습니다. 국민들은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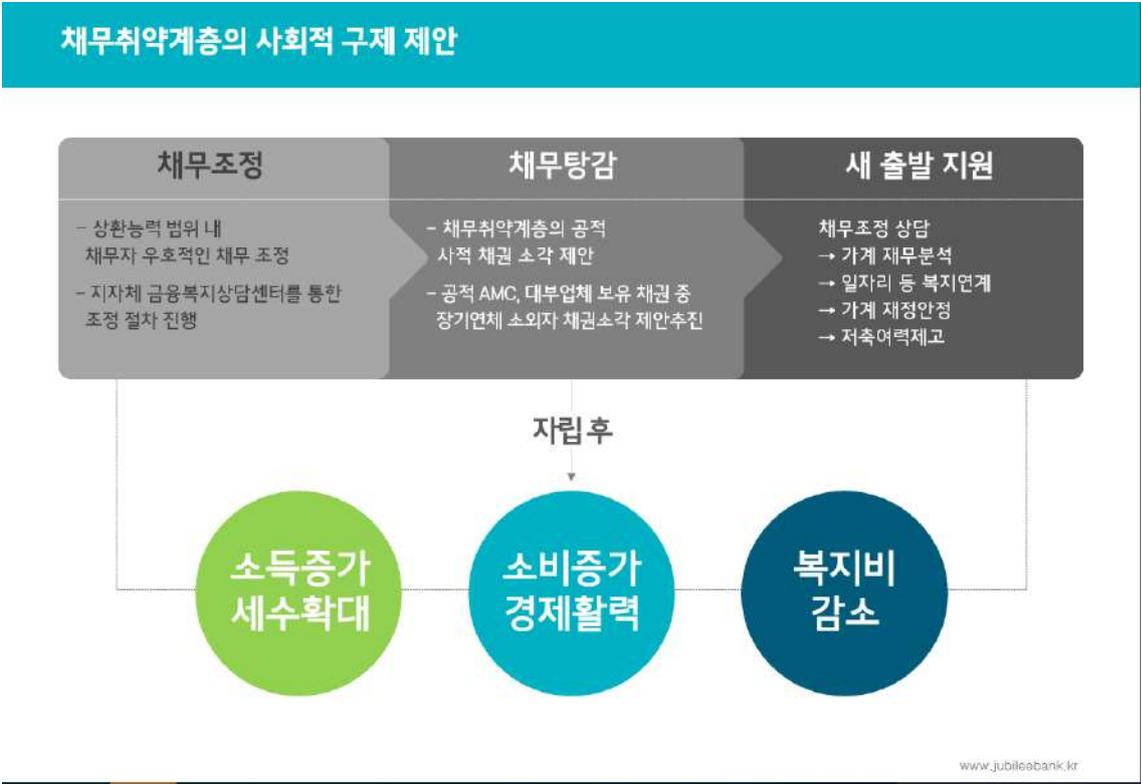
그 결과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말 기준 1,359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가계부채가 연채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하고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 빌려 쓰라고 꼬드기던 금융회사들이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체자들에게 언제 그랬냐는 듯 가혹해집니다. 금융회사들은 부실자산을 장부에서 떨어버리기 위해 연체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한번 쥐어짜고 난 부실채권들이 또 다시 팔리기를 거듭하면서 연체자들은 비인

간적인 추심에 시달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시민의 후원금으로 부실채권을 사서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구제하고 모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등 새 출발을 지원합니다. 주빌리은행은 사람을 살리는 착한 은행입니다.

## 2. 주빌리은행의 주요 업무









주빌리은행이 지금까지 6,306억원(38,046명)을 소각했는데 이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주빌리은행이 ‘빛 탕감 운동’에 앞장섰고, 금융공기업과 금융사들의 부실채권 소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결과입니다.

지난 제6회, 제7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에 참석했던 제윤경(前 주빌리은행 대표)씨가 국회의원이 되어 ‘롤링주빌리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주빌리은행의 할 일이 사라지고 결국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빌리은행은 전국 여러 지역의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각 지역별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성남시, 전주시,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광주 광산구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주빌리은행은 여러 센터들과 함께 금융복지 상담을 통해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한 755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3명 중 한명 꼴로 공적채무조정이 필요했고, 7명 중 6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처해 있었으며, 2명 중 1명은 1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사는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비로 빚을 갚고 있다는 것입니



다. 내담자 중 복지 수급을 받는 경우가 125건인데 이 중 51건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복지로 받은 수급비를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는 ‘세금(공익)→금융비용(사익)’의 악순환이 확인됩니다. 가난할수록 약탈적 금융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부업 TV광고 전면 금지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제윤경의원과 함께 대부업 대출광고 금지법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시간대별로 규제를 했지만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TV광고를 연내에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이자 20% 제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업 이자는 27.9%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도 많이 내린거지만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율입니다.

제윤경의원이 지난해 대부업 이자 20%제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투어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대부업 이자 20%제한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외에도 죽은 채권 부활 금지, 채권 이력제도 도입, 대부업 대출 연대보증 금지 등 채권보다 인권을 더 중시하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4. 주빌리은행의 과제와 전망

주빌리은행은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만큼 돈(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지옥 같은 현실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빌리은행이 금방 문을 닫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8대 공기업 특수채권만 60조원이 넘습니다. 이 중 89%가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입니다. 이번에 소각한 21조원은 15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금융사들이 보유한 특수채권이 20조원이 넘는데 이 중 40%인 8조2천억여원이 소멸시효를 1회 이상 연장한 채권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도덕적해이가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빌리은행과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약으로 금융복지 공공성이 확대되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바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관리 측면에 편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계 부채 부실화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가계 재무 컨설팅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복지상담 및 채무자 인권보장에 관한 법제도 개선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채권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과 구제보다 채권회수에 무게가 쏠려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비스 체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복지연계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민금융진흥원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선생님이 사형을 구형 받았을 때 돈 빌려 쓰고 안 갚은 것 없나 돌아봤다고 합니다. 송파의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지면서도 마지막 월세를 남겼습니다. 빛이 갖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보여줍니다.

빛은 갚아야지만 존엄한 삶 모두를 포기해 가며 노예와 같은 처지에 내몰릴 때까지 갚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